미국 시민들, 주식으로 돈 못 벌고 있다

전형적 미국 중간층 가정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변했나

2013.07.29 | 김병권 | bkkim21kr@naver.com

1. 미국 시민은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다?
2.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악화
3. 미국 '주식시장 민주화'의 허상
4. 주택거품 붕괴, 중산층에게 더 고통이었다.
5. 한국보다 주택관련 부채 더 많은 미국 가정

새사연 추천보고서는 국내외 우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Lawrence Mishel, Josh Bivens, Elise Gould, Heidi Shierholz, 2012,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12th Edition Wealth",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새사연의 진보적 정책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지식공유자산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사연 회원으로 참여해 함께 진보의 정책 자산을 늘리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도록 합시다

Copyrights(c) 2013 SAESAYON All rights reserved. | www.saesayon.org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6-1 302호 | TEL : 02-322-4692 | FAX : 02-322-4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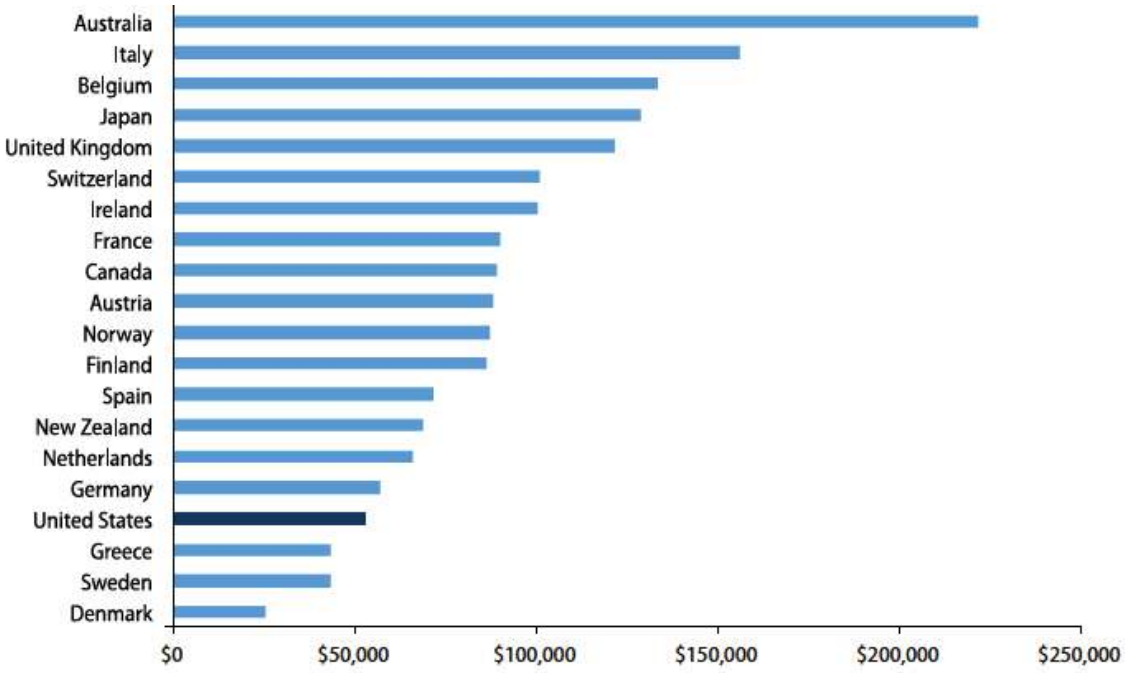
핵심 결론
○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미국은 소득 불평등 뿐 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상위 1%의 부자가 국가 부의 35.4%를 쥐고 있고, 하위 90%는 전체 부의 고작 23.3%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위 60%는 오히려 부가 줄어들었다. 또한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자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이다. ○ 1980년대 이래 미국에서 '주식시장 민주화(democratization of the stock market)' 이야기가 무성했지만, 놀랍게도 조금이라도 주식을 보유한 가구 비중은 적었다. 2010년 기준으로 절반이 안 되는 가구들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31.1%만이 1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위의 흑인과 히스패닉 가구는 주식이 전혀 없다. ○ 대부분 가구에서는 주식이 아니라 주택이 부의 원천으로서 훨씬 중요하다. 2010년에 중위 가구의 순자산이 6만 1천 달러인데 이중에 주택지분이 30,300달러였다. 이것은 주택지분이 전형적 가계의 부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7년 거품 붕괴와 이후 대침체로 인해 중산층 가구의 부는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2007~2010년 동안 상위 1% 가구의 평균 부는 약 15.6% 떨어졌지만 중위 가구는 무려 47.1%나 떨어졌다. 그리고 2010년 하위 40% 가구는 주택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는 통계작성이후 처음이다. ○ 2006년 주택거품이 터지면서 주택가격은 폭락했지만 모기지 부채와 주택담보 대출 부담도 폭락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지분은 급격히 떨어져서 결국 2009년 1분기에 37.2%가 된다. 집 가진 사람들도 2/3는 자기 지분이 아니게 된 것이다. 2011년 38.2%로 약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낮다. *※ 이 연구는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EPI)가 매년 발행하는 〈미국 노동실태 보고서(The State of Working America)〉의 12번째 판본(2012년 11월 발표) 가운데 부(Wealth)관련 40여 쪽 분량의 내용이다.*

1. 미국 시민은 생각 보다 부자가 아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미국 시민은 우리보다 얼마나 부자일까? 당연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다수 미국 시민들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과 관계를 맺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언제나 기회의 땅이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늘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생활을 한다고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그림 1]을 보면 각국의 중간에 위치한 성인의 재산은 미국이 52,753달러로 평균 보다 아래였다.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중위 가구(성인이 아니다)의 순자산은 1억 3800만원이었다.[1] 달러 환산으로 보면 10만 달러가 조금 넘는데, 가구당 성인이 평균 2명이라고 해도 대략 미국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대보다 미국 중간 가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중위 값이 아니라 평균값은 많이 다르다. 미국 성인 평균 재산은 중간 값의 4.7배로서 약 25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두 값의 차이는 공식적으로 두 배쯤 된다). 중간 값과 평균값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그 만큼 미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그림 1] 주요 20개 국가에서 성인 1인당 부의 중위 값 비교(2011년 달러기준)



Source: Authors' analysis of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2011)

우리는 이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부나 빌게이츠와 같은 억만장자들의 부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지식은 짧다.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택거품,

1) 통계청.2012.<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거대한 가계부채, 심각한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뿐 종합적인 시야는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자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일까? 또 우리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압축적으로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보고서가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매년 발행하는 미국 노동실태 보고서의 부(Wealth)관련 부분이 그것이다. 2012년으로 12번째 업그레이드가 되어 201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시민들 사이의 부의 불평등 정도가 어떤지 살펴보자.

2.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악화되었다.

가구나 개인의 부(Wealth,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라고도 번역)는 보통 '순 자산(net worth)'으로 나타낸다. 순 자산은 "특정 시점에서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과 비 금융자산(주거주택, 비 주거 부동산, 기타 유형 자산), 그리고 연금(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부채(모기지 부채, 신용대출, 밀린 의료비, 학자금 대출, 기타 부채)를 뺀 것"이다.

순 자산은 다시 순 비금융자산(실물자산; net nonfinancial asset tangible)과 순 금융자산(net financial asset)으로 나눌 수도 있다. 순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내구재에 모기지 부채를 뺀 것이다. 순 금융자산은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와 은행예금에서 비 모기지 부채를 뺀 것이다.

임금소득 등 소득과 함께 부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결정요인이다. 부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창업 밑천을 만들어주며, 은퇴 후 생활자금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당좌예금, 주식, 채권 같은 유동성 자산은 가계가 실업이나 질병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동차나 컴퓨터, 주택 같은 유형 자산은 가족 구성원들이 직장이나 학교, 공동체 생활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의 소득 불평등과 함께 부의 불평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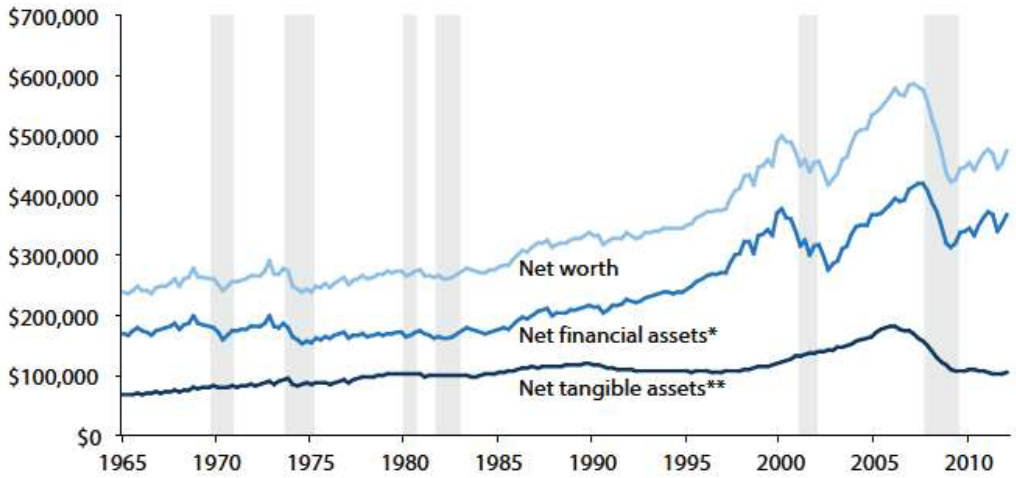
이 문제에 대해 스티글리츠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자료 수치는 일정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만을 반영한다. 부의 불평등에 관한 자료 수치에 주목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부의 불균형은 한 해 소득의 불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부는 소득에 비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능력의 차이를 훨씬 극명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2)]

특히 소득과 달리 부는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물림이 된다는 말이다. 역사

2) 조지프 스티글리츠,2012,『불평등의 대가』,83쪽

와 현실의 사례에 의하면, 조세 제도나 사회 규범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세대와 자식 세대의 부는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도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부는 계급간 이동성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목은 특히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하는 미국의 핵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평균 가계 순자산, 순 금융자산, 순 유형자산(2011년 달러 기준)



* Financial assets minus nonmortgage debt
** Housing and consumer durables minus home mortgages
Note: Data are quarterly and extend from the first quarter of 1965 to the first quarter of 2012. Shaded areas denote recessions.

Source: Authors' analysis of Federal Reserve Board Flow of Funds Accounts and Current Population Survey/ Housing Vacancy Survey, *Historical Tables* (Table 7)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추천 보고서에서 분석된 미국 가계의 부(순 자산)를 추적해가자. [그림 2]는 미국 순 자산 변동의 역사적 추이다. 1965년에서 1994년까지 미국에서 가계의 실질 평균 순 자산은 매우 완만하게 상승했는데 평균 상승률이 1.2%였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순자산은 빠르면서도 불안정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두 번의 피크가 있다. 첫 번째 상승기는 1994~199년이었는데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이며 42.1%까지 순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거품 붕괴이후 1999~2002년까지 12.9%가 추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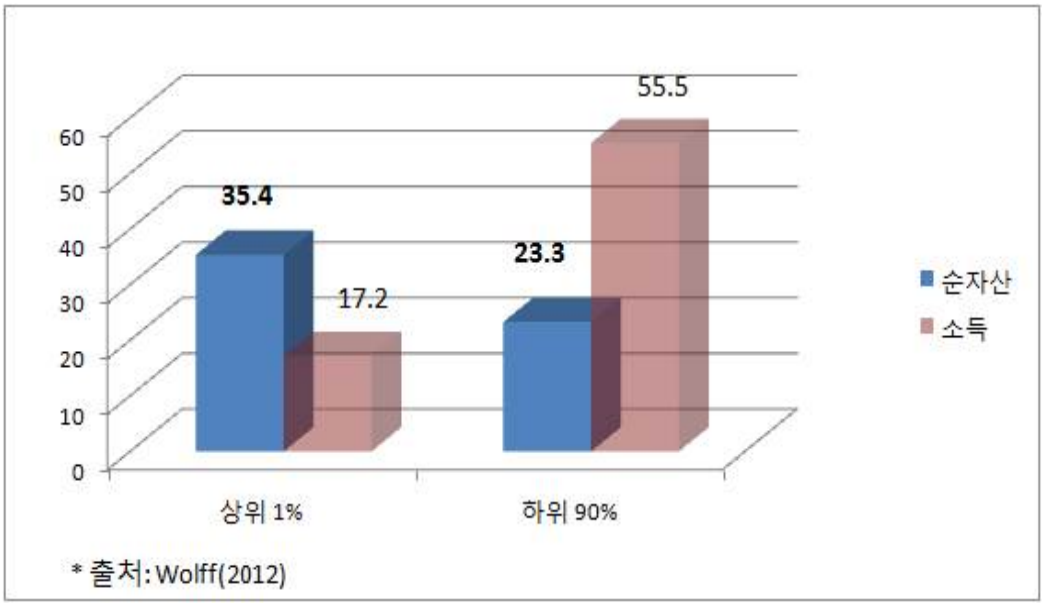
순 자산은 2002~2006년까지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주택거품에 의한 것이었고 2006년 거품이 터지면서 2006~2009년 기간 동안 25%가 떨어진다. 2009년 이후 다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여 2009~2012년 초반 기간까지 12% 정도 다소 올랐다.

[그림 2]를 평균적으로만 보면, 미국에서 금융자산이 더 중요한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 변동성을 이끌고 있는 것도 금융자산이다. 하지만 1997~2005년 사이에는 순 유형 자산(특히 주택)의 변동성도 심했는데 약 70%까지 상승했던 것이다. 물론 주택 거

품 붕괴로 고스란히 그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고 지금껏 회복되지 못했다.

이제 전체 자산 변동이 아니라 미국 시민 가계의 자산 계층별 구성과 변동추이를 보자.[3] 그래야 부의 불평등을 볼 수 있다. 우선 [그림 3]을 보면 미국에서도 역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17.2%인데 비해 부의 집중도는 두 배에 해당하는 35.4%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4]를 보면, 미국의 중간 가구 대비 상위 1%의 부는 1990년대 이래 180배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무려 288배에 달했다.

[그림 3] 미국에서 부의 분배와 소득 분배 비교(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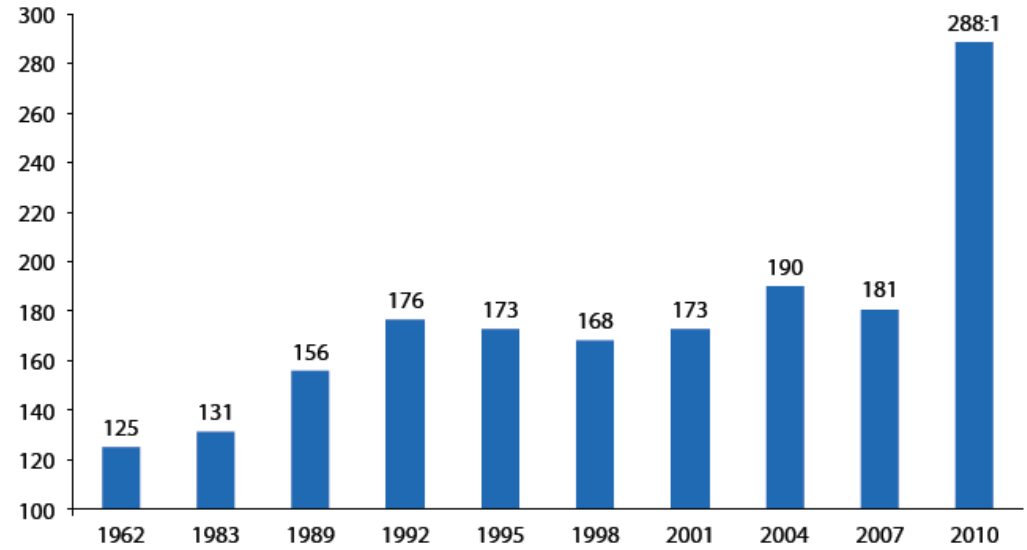


미국에서 20세기 이후 소득 불평등 감소와 함께 감소하던 부의 불평등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상승과 부의 불평등 상승은 같이 움직였다. 2007년 금융위기는 자산 계층을 가리지 않고 부의 감소를 초래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많이 달랐다. 2007~2010년 사이에 상위 5%가구의 부는 14%정도 떨어지는데 그쳤지만 중위 5분위 가구는 45%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앞서 본 것처럼, 1962년에 1%부자의 평균 부는 중위가계의 125배 정도였다. 그런데 약 50년 뒤인 2010년에는 288배가 되었다. 그러면 울트라 부유층 포브스 400명의 부자들은 어땠을까. 1982년 11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38억 달러로 증가했다. 400명 부자의 자산을 모두 합치면 약 1조 5천억 달러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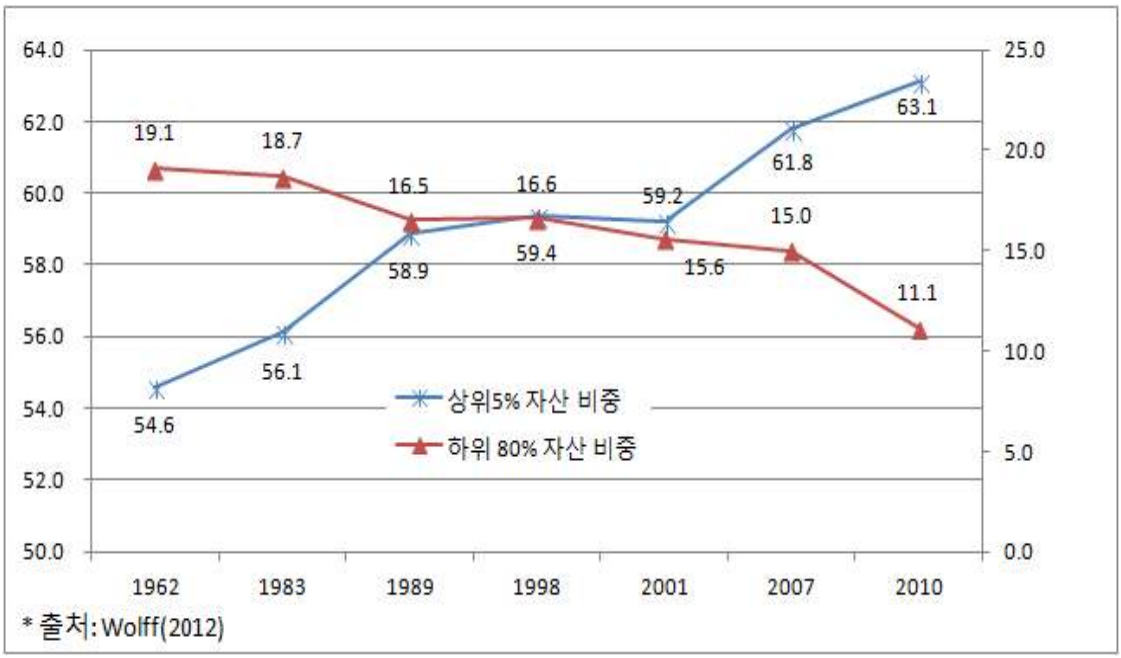
3) 미국도 부의 불평등을 알아보기 위해 3년 마다 한 번씩 연준에서 실시하는 소비자 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를 사용한다.

[그림 4] 미국 중위가구 대비 상위 1%가구의 평균 부의 크기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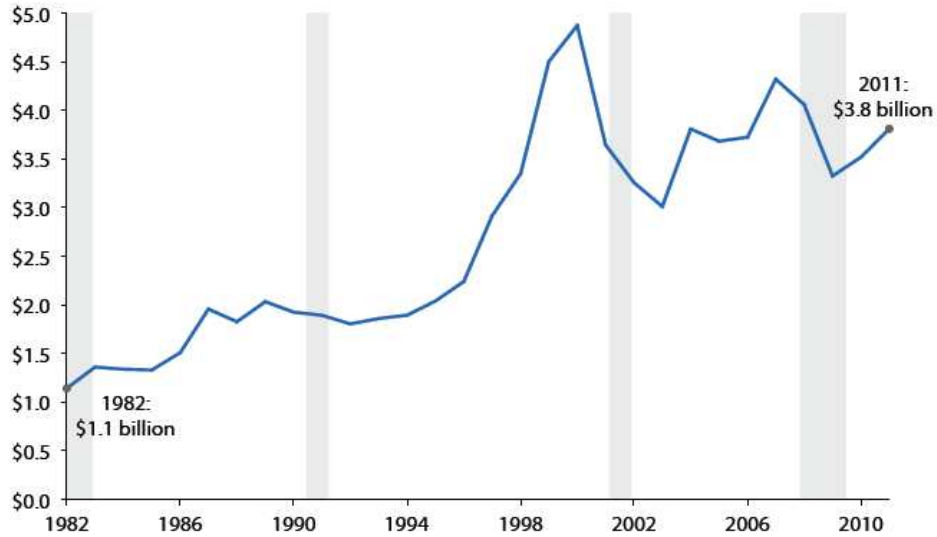
Source: Wolff (2012)

[그림 5] 자산 계층별 미국 전체 부에 대한 점유 비중 변화 추이



* 출처: Wolff(2012)

[그림 6] '포브스 400' 부자들의 연 평균 순자산 추이
(2011년 달러, 10억 달러)



Note: Shaded areas denote recessions.

Source: Authors' analysis of Broom and Shay (2000) and *Forbes* (various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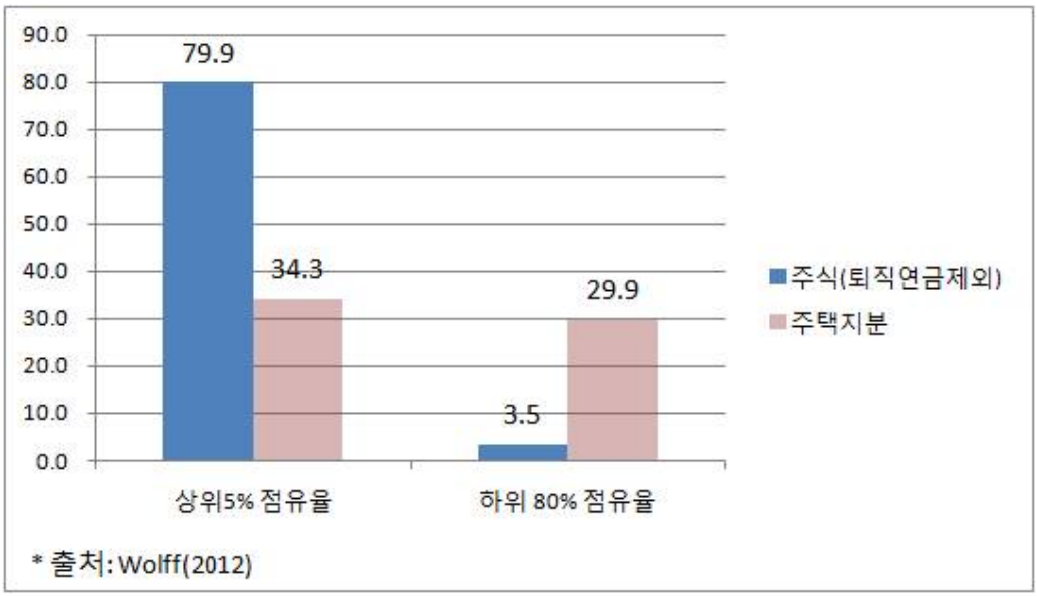
3. 미국 '주식시장 민주화(democratization of the stock market)'의 허상

자산 분배는 자산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1980년대 이래 '주식시장 민주화(democratization of the stock market)' 이야기가 무성했다.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은 상대적으로 소수 가계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주택은 꽤 폭 넓은 가계에 분배되어 있다. 그 결과 부유한 가구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훨씬 높고, 서민들은 주택 쪽의 비중이 높다. 사실 중산층들은 부의 대부분이 주택지분이다. 이것은 중산층들이 주택거품이 꺼질 때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7]을 보면 상위 5% 부자들이 연금을 제외한 주식(간접투자 포함) 자산의 79.9%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위 80%는 겨우 3.5%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주식만큼 편중되지는 않았다. 상위 부자 5%가 소유한 주택자산 비중은 34.3%였고 하위 80%의 경우도 29.9%나 되기 때문이다.

2007년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상위 1%는 24.7%의 부동산 자산이 줄어서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한다. 하지만 고점 대비 44.6%까지 추락한 중산층은 1983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후퇴했던 것이다. 한편, 주택이 주식 등에 비교하여 훨씬 더 넓게 분포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의 중산층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택 자산이 제로 이거나 마이너스였던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림 7] 미국에서 자산유형별 자산분포(2010년 기준)



지금도 매 시기의 주가 변동을 언론매체들이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 간접투자를 포함해도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적다. 이는 주식시장이 가계의 직접적인 금융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1980년대 이후의 '주식시장 민주화(democratization of the stock market)' 담론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

주식자산의 불균등한 분배는 지속적인 현상이었다. 상위 1%는 지난 30년 동안 전체 주식자산의 1/3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상위 20%는 전체 주식자산의 90%를 보유했고, 하위 80%가 대략 10%남짓의 주식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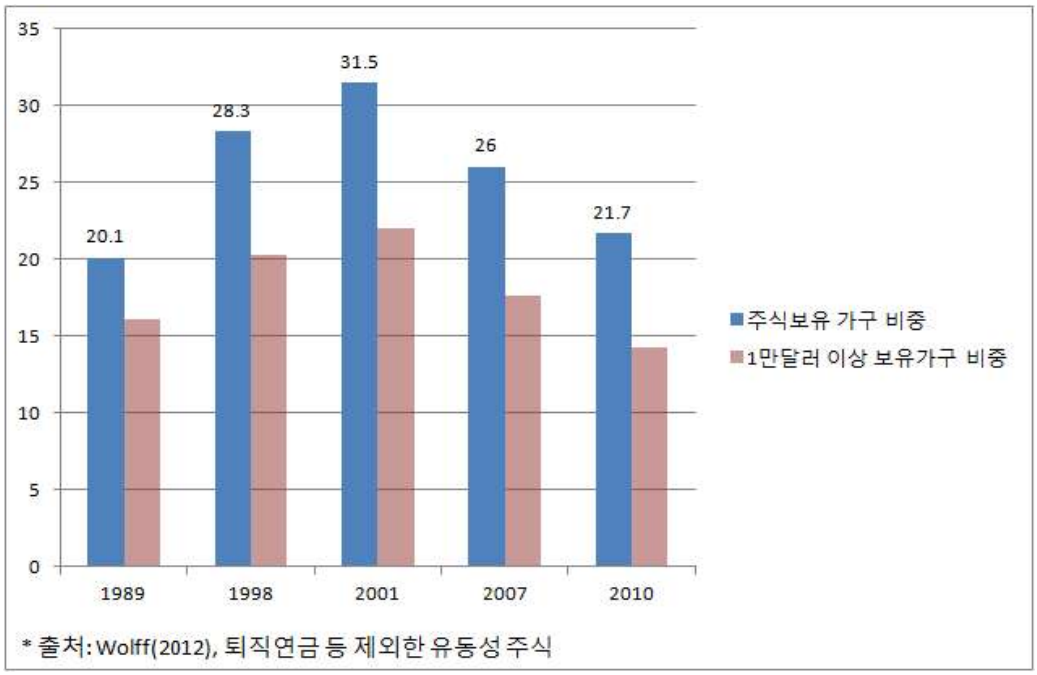
4. 주택거품 붕괴, 중산층에게 더 고통이었다.

실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미국 가정의 재산 형성에 있어서 주식보다 주택이 훨씬 중요하다. 2010년 중간 3분위 가계의 순자산이 61,000달러였는데, 그 중에 38,300달러가 주택자산이었다. 다시 말해서 주택자산이 64.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주택소유는 오랜 동안 경제적 지위상승을 위한 확고한 기반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주택 거품과 붕괴는 이러한 연관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1960년대부터 약 50년 동안의 주택소유 역사를 보면, 1980년까지 주택소유 비중이 늘다가 1980년대에는 줄기도 했지만 단 한번도 65.6%를 넘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주택소유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에는 69%까지 올라가게 된다. 1990년대의 '주식 민주화' 허상에 이어 2000년대의 '자가 주택 소

유 시대(Ownership society)'의 허상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다 결국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추락하게 된다.

[그림 8] 미국에서 주식을 소유한 가계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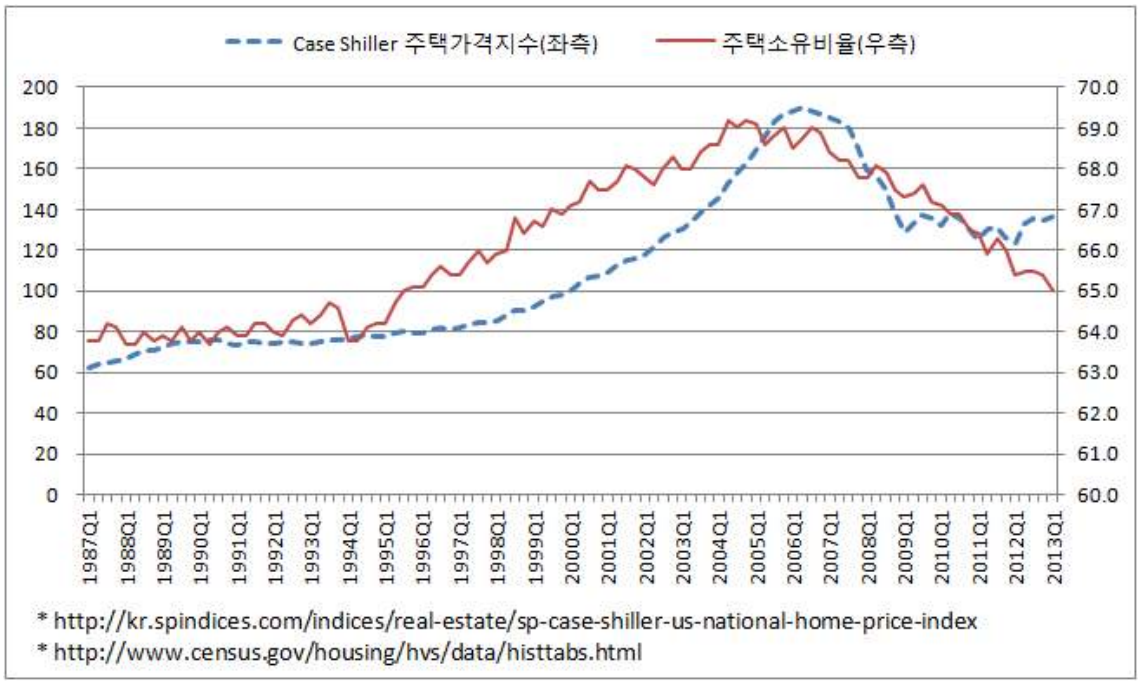


물론 주택소유 비중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주식보다 주택자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부자들의 자가 주택 소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2009년 기준으로 상위 20%의 주택소유 비중은 88.9%에 이른다. 반대로 하위 20%의 주택소유 비중은 47.0%였다. 거의 두 배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자산을 엄밀히 볼 필요가 있다. 자기 소유 주택이라고 해도 모두 자신의 돈을 구입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 가운데 소유자의 몫이 바로 주택 지분(home equity)이다. 즉 주택지분은 현재의 주택 시장가격 마이너스 모기지 채무 잔액(그리고 주택담보대출, Home equity loans)이다.

주택가격에서 부채를 뺀 소유자 지분은 1980년대까지는 평균적으로 68.3%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9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1997년 중반 경에는 58%까지 떨어진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가격은 극적으로 상승하지만 집주인의 주택지분은 60%에서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는 주택담보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을 구매할 때 소유자가 더 돈을 적게 내고 대출을 많이 안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행위를 한 배경은 사람들이 집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림 9] 주택가격 변화와 주택소유 비중의 변화 비교



여하튼 2000년대부터 가계는 경쟁적으로 주택을 구매했는데, 이는 주택 구매가 스마트한 투자라고 생각했고, 집값이 너무 오르기 전에 사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나 변동금리 대출 등 돈이 없어도 차입하기 좋은 상품들이 개발되면서 주택시장으로 뛰어드는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구들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고 주택을 사기위해 광범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중앙은행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통제되지도 않았다. 주택 거품을 제어하기 위해 규제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결국 2006년 주택거품이 터지면서 주택가격은 폭락했지만 모기지 부채와 주택담보 대출 부담도 폭락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주택 소유자들의 지분은 급격히 떨어져서 결국 2009년 1분기에 37.2%가 된 것이다. 집 가진 사람들도 2/3은 자기 지분이 아니게 된 것이다. 2011년 38.2%로 약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낮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은행과 같은 신용기관들이 더 많은 비중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주택은 대다수 가정에서의 일차적인 자산목록이다. 따라서 주택지분의 축소는 (대다수는 아니지만)상당히 많은 가계의 경제적 안전망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좀 더 나아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자기 지분이 없어지고 결국 압류를 당한 경우는 어떠한가? 압류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2/4분기에 7.5로서 최고점을 찍는다. 이는 위기 이전 압류건수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2009년 1/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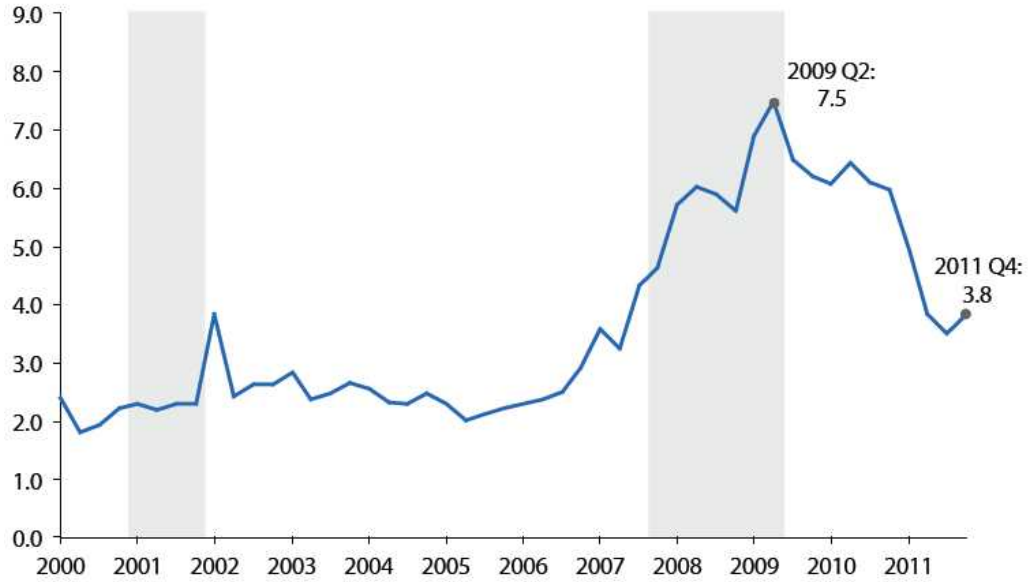
[그림 10] 주택 가격에서 채무를 뺀 주택 소유자의 지분 비율

Note: Data are quarterly and extend from the first quarter of 1969 through the fourth quarter of 2011. Shaded areas denote recessions.

Source: Authors' analysis of Federal Reserve Board Flow of Funds Accounts

기에는 전체적으로 압류되었던 주택이 100만 가구가 넘었다. 2011년 말까지 압류건수는 3.8까지 떨어졌지만 아직 거품 붕괴 이전보다 높다.

[그림 11] 주택소유 1000가구당 압류 건수 변화 추이



Note: Data are quarterly and extend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0 through the fourth quarter of 2011. Shaded areas denote recessions.

Source: Authors' analysis of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12) and Current Population Survey/ Housing Vacancy Survey, *Historical Tables* (Table 8)

5. 한국보다 부동산 관련 부채 비중이 더 큰 미국 가정

이제 미국 가정이 짊어지고 있을 부채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산(Asset)은 순자산의 한쪽 측면이고 부채(Liabilities, Debts)가 또 다른 측면이다. 일반 시민 가정들이 주택과 자동차, 교육 등 목돈이 들어가는 곳에 부채를 활용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활용할 때의 부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부채 상환으로 인해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가치도 없는 것을 하느라 부채가 쌓여가는 경우다. 또한 이럴 수도 있다. 실제 현금을 주고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로 집을 사고 현금은 딴 곳에 소비하는 것이다. 실제 2000년대 이래 이런 경향이 상당했을 수 있다.

우선 미국 시민 가정들이 무슨 이유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1]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과 교육비 지출에서는 역사적으로 비중이 달라지고 있지만 나머지 구성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빚을 지는 이유는 거의 유사했다는 것이다.

[표 1] 미국에서 용도에 따른 가계부채 구성 변화 추이

	1989	1995	1998	2001	2007	2010
Primary residence	66.5%	72.3%	70.0%	72.9%	71.8%	71.4%
Other residential property	8.8	8.2	7.8	6.5	10.8	10.5
Investments excluding real estate	3.9	1.0	3.3	2.8	1.6	2.0
Vehicles	10.6	7.6	7.6	7.8	5.5	4.7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redit card debt)	6.1	5.7	6.3	5.8	6.2	5.7
Education	2.4	2.7	3.5	3.1	3.6	5.2
Other	1.7	2.4	1.5	1.1	0.5	0.4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ource: Authors' analysis of Federal Reserve Board (2012a) and Bricker et al.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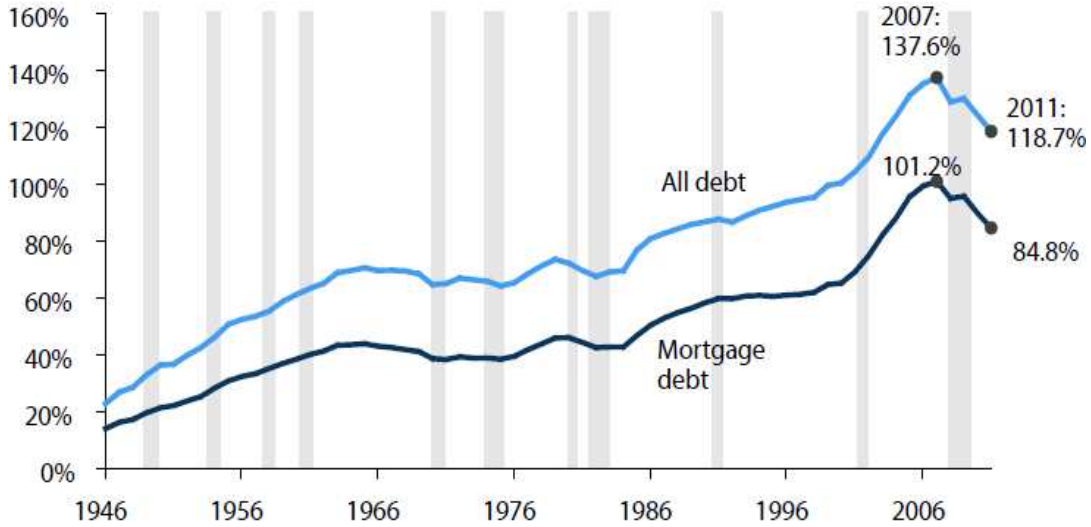
2010년 기준 부채의 71.4%는 거주 주택(primary residence)의 구매나 개선과 연계되어 있다. 1995년에 72.5%로 올라간 이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비중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은 크게 줄었고, 대침체 이후 교육을 위한 대출은 크게 늘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서 2010년 기준 전체 대출금액 가운데 5.2%를 차지한다. 이는 1989년의 2.4배이다. 위의 [표 1]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금 대출이 있는 가구 비중이 2007~2010년 사이 15%에서 19.2%로 늘어났다. 평균 부채 규모도 같은 기간 22,500달러에서 25,600달러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지난 30년 동안 부채 규모는 어떻게 증감했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12]를 보

면, 1980년대 중반 이래 모기지 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Home equity loan)이 모두 증가했고 2007년에 역사상 최고점인 137.6%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11년 기준 118.7%로 떨어졌다. 특히 모기지 부채가 101.2%에서 84.8%까지 떨어졌다.

[그림 12]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화 추이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 상환부담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이 방해를 받을 때이다. 이런 점에서 부채 부담을 잘 표현해주는 지표가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the financial obligations ratio)을 알아보는 것이다. 아래 [그림 13]을 보면 세입자들은 1980년에 비해 2007년, 그리고 2011년에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들은 2007년에 17.5%까지 올라갔지만 2011년 14.4%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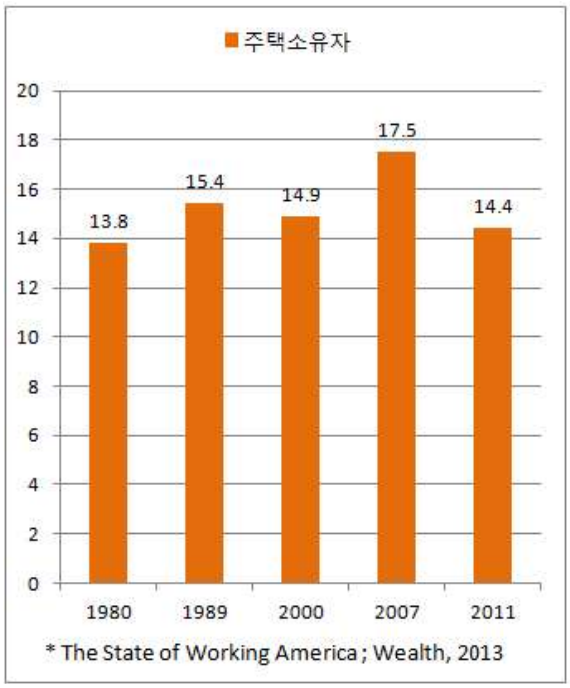
그러면 얼마나 상환이 부담이 되는가?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DSR)이 40%를 넘는 경우 이를 경제적 곤란계층(economic hardship)이라고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 고 부담 계층이 많다는 것은 놀라만한 일도 아니다. 2010년 기준 상위 10%소득 계층은 고 부담 가구 비율이 2.9%에 불과했지만 하위 20%는 1/4를 넘고 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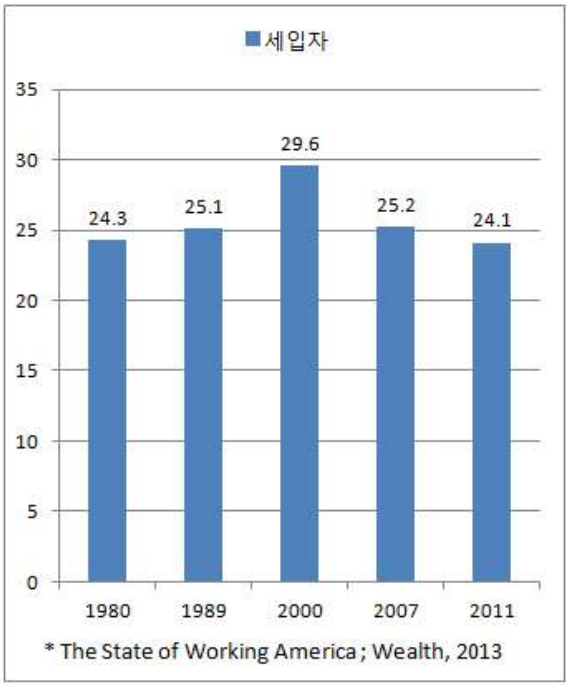
원리금 상환 부담이 40%가 넘는 경제적 곤란계층(economic hardship)이 부채를 실제로 감당하지 못하면 파산(Bankruptcy)할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파산에 앞서서 실업, 질병, 이혼 등의 불행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더 그러하다. 파산선언은 개인으로 하여금 비 모기지 부채를 면제받거나 재조정하여 부

4)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DSR)는 the financial obligations ratio와 달리 임대료를 제외하고 있다.

채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이다(파산과정에서 오직 비 모기지 부채만이 면제될 수 있고 파산법원은 주거주택에 대한 모기지 부채를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림 13] 미국 가계의 부채 원리금상환(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 변화 추이





[표 2] 소득 구간별 고 부담층(원리금 상환비율이 40%이상) 가계 비율

	Income fifth				Breakdown of top fifth	
	Bottom	Second	Middle	Fourth	80th–<90th percentile	Top 10%
1989	24.6%	14.5%	11.0%	5.8%	3.4%	1.9%
1998	29.9	18.3	15.8	9.8	3.5	2.8
2001	29.3	16.6	12.3	6.5	3.5	2.0
2007	26.9	19.5	14.5	12.9	8.2	3.8
2010	26.1	18.6	15.4	11.0	5.3	2.9
Change						
1989–2007	2.3	5.0	3.5	7.1	4.8	1.9
2007–2010	-0.8	-0.9	0.9	-1.9	-2.9	-0.9

Note: A high debt burden is a ratio of debt service payments to income greater than 40 percent.

Source: Bricker et al. (2012)

[그림 14] 미국에서 성인인구 1000명당 파산 소비자 수 추이

Note: Shaded areas denote recessions.

Source: Authors' analysis of bankruptcy statistics from the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various years) and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파산은 1989년부터 서서히 늘어났는데 이는 소득이 정체한 상황에서 부채 부담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성인 1000명 중에 9.6명이 파산을 선고했다. 2005년 파산법이 바뀌었는데 파산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대침체 이후 파산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급격한 상승을 기록했다. 2011년에 약간 줄어든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리 의미에서 스티글리츠가 최근 저작에서 부의 불평등을 포함한 미국 불평등 구조를 아홉 가지로 요약한 내용을 실어본다.[5)]

1) 최근 미국의 소득 성장은 주로 소득 분포도상 상위 1%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2) 그 결과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3) 지금 하위 계층과 중위 계층은 금세기가 시작될 때보다 경제 형편이 더 나빠졌다.
4)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
5) 불평등은 소득 뿐 아니라 불안정과 건강 등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여러 다른 변수들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6) 특히 어려운 하위 계층의 삶은 경기 침체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졌다.
7) 중산층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8) 소득 계층 간 이동(income mobility)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개념은 신화일 뿐이다.
9) 미국은 선진 공업국들 가운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고,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는 일

5) 조지프 스티글리츠,2012,『불평등의 대가』, 110~111쪽

에도 가장 적은 자원을 투입한다. 또한 미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3년 새사연의 '추천 보고서' 목록

2013년 7월 29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추천 보고서	2/18	헬리콥터 머니: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평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2/21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김병권
추천 보고서	2/27	국제 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이은경
추천 보고서	3/4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3/5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최정은
추천 보고서	3/6	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김수현
추천 보고서	3/14	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의 전망	김병권
추천 보고서	3/20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이은경
추천 보고서	4/4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김수현
추천 보고서	4/8	금융위기의 대안 신용 협동조합	이수연
추천 보고서	4/19	2020년까지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	이수연
추천보고서	5/6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	이은경
추천보고서	5/10	누구를 위한 '젠더평등' 인가?	최정은
추천보고서	5/16	권력 유지의 기술	여경훈
추천보고서	5/26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김수현
추천보고서	6/20	추천하지 않는 추천보고서	이은경
추천보고서	7/8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키웠다	김병권
추천보고서	7/29	미국 시민들, 주식으로 돈 못 벌고 있다	김병권